

GLOBAL TREND

세계지방자치동향

일본

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원전 재가동 검증 : 니가타현(新潟県)

일본

일본의 정부 간 보조금과 지방재정 형평화 추진

미국

애틀랜타 대도시 권역의 취약계층 교통지원 프로그램(Simply Get There.org, Atlanta, GA)

한국

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(지방시대위원회, 202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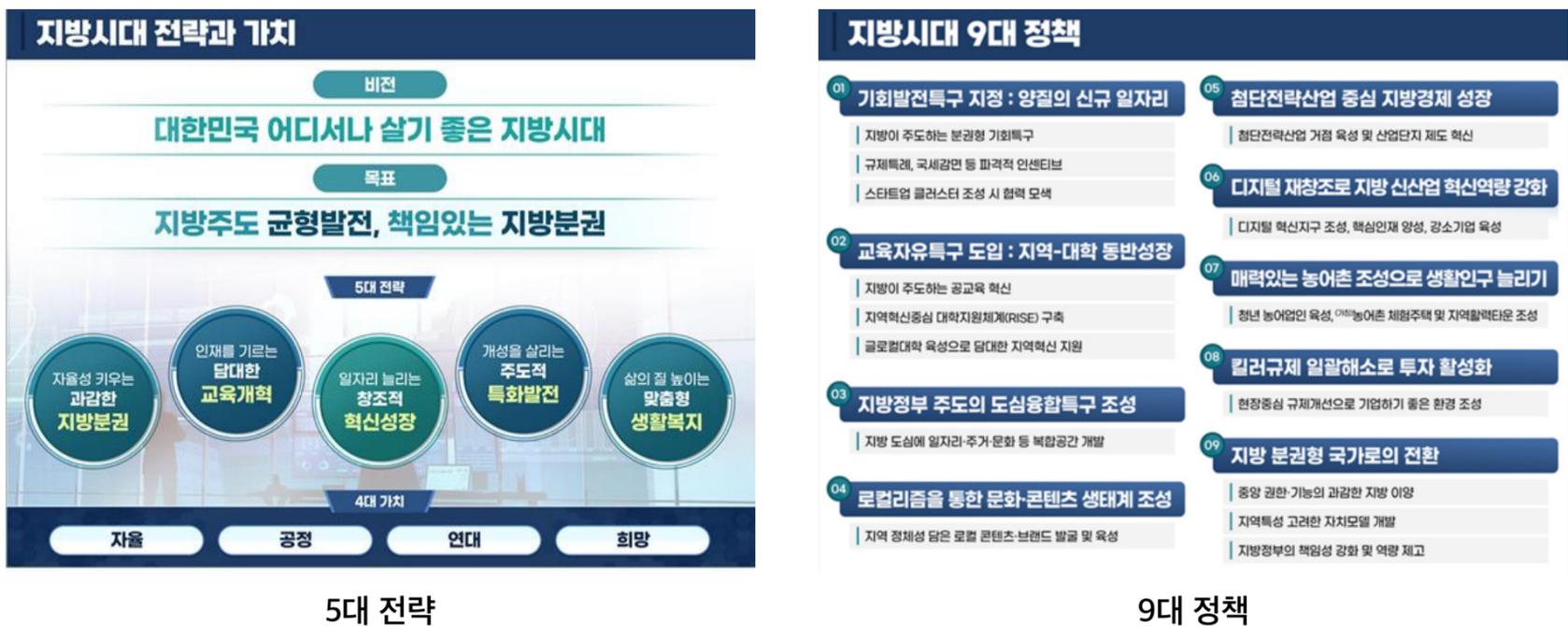


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(지방시대위원회, 2023)¹⁾

지방시대 전략과 가치

- ▶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, 고용, 기업, 인구 등에 걸쳐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, 전체 시군구의 40%(89개)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방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음(행정안전부, 2021)
- ▶ 상기와 같은 실정을 극복하고자 지방시대위원회(2023)는 ‘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’를 비전으로, ‘지방주도 균형발전, 책임있는 지방분권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제시함

그림 1.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



출처: 지방시대위원회(2023),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, 지방시대위원회 보도자료

- ▶ 특히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대 특구(기회발전특구, 교육자유특구, 도심융합특구, 문화특구)를 도입하기로 함
 - 4대 특구는 모두 ‘분권형, 지방주도형’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될 계획임
 - 이 가운데 ‘기회발전특구’와 ‘교육자유특구’는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

1) 2023.9.14. 지방시대 선포식 행사 보도자료(지방시대위원회)의 내용을 발췌, 소개함

4대 특구별 주요 내용

① 기회발전특구

- ▶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, 규제 특례, 재정 지원,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된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²⁾
 - 소득·법인세, 양도세, 취득세, 재산세뿐만 아니라 가업상속세를 포함하여 5가지 이상의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함
 - 기업의 지방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함
 - 또한 주택 특별공급,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, 초·중·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정주 환경을 개선, 마련함

② 교육자유특구

- ▶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, 지자체, 교육청, 대학, 지역 기업,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운영하는 특구를 의미함
 -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, 공교육 경쟁력 제고, 지방분권 강화, 규제 합리화 등 지방 교육개혁을 지원할 계획임
 -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·도 교육청이 함께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여,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하고, 중앙정부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담당함
 - 교육부가 갖고 있던 지역 대학 관리·감독 권한과 약 2조 원의 예산 집행 권한이 라이즈(RISE·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)를 통해 2025년 지자체로 이양됨
 - 지자체와 연계한 대학을 지원해 주는 글로벌 대학 사업은 30개 지방대를 뽑아 5년간 3조 원을 집중 지원함

③ 도심융합특구

- ▶ 도심융합특구는 성장 기반을 갖춘 주요 도시 도심을 대상으로, 공간조성(H/W)과 기업지원(S/W)을 융합하고, 규제완화, 인센티브를 통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임

2)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내용은 부록의 표에 자세하게 수록함

-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·벤처 일자리(산업)와 삶(주거), 여가(상업·문화)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‘판교 테크노밸리’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임
- 도심융합특구의 경우 올 하반기에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(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)를 중심으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선,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임

④ 문화특구(대한민국 문화도시)와 로컬 창업·콘텐츠 생태계

- ▶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‘문화특구(대한민국 문화도시)’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, 문화공간 조성,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·확산,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
-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·전시의 창작·제작·유통에 총 490억 원을 투입함
- 지방의 자원·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가치 창업가(로컬 크리에이터)를 발굴하고,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 총 88억 원을 지원함

기대효과 및 제언

- ▶ 기존 특구들과의 차별화된 운영방식으로 인한 사업추진 주체의 참여율 제고
 - 기존 특구들 대비 대폭 상향된 인센티브와 상향식 운영 방식의 적용을 통한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됨
- ▶ 특구유치를 위한 지역 내 과열 경쟁 우려
 - 특구지정은 시도당 1개라는 형평성이 부여되지만, 시도 내 지역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소지역주의 현상이 빚어질 우려가 상존하는 바,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가 예상됨
- ▶ 기존 특구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필요
 - 기존 지정된 특구(2020년 4월 기준 경제특구는 전국의 748개) 및 기존의 혁신도시, 추후 공공기관 이전 등의 관련 국가균형발전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에 대한 강구가 요구됨
- ▶ 특구지정의 성과제고를 위한 세부 제도의 면밀한 설계 필요
 - 특구의 인센티브, 즉 규제해제 및 세제혜택 관련 추가 관련법 통과가 요구되며, 각 특구별 선정 방식 및 기준의 선정립이 요구됨

부록

표 1. 기회발전특구 주요 인센티브(종합)

구분		주요 내용
① 세제지원	1.~2. 소득·법인세	·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·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·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·법인세 감면 (5년 100% + 2년 50% 감면)
	3.~4. 취득세·재산세	· 특구로 기업 이전(수도권에서 이전 限) 및 특구 내 기업 창업 시 지방세 감면 * 취득세(100% 감면), 재산세(5년 100% + 5년 50% 감면) ** 지방정부의 지방세 감면 자율성 부여 검토
	5. 개발부담금	· 개발부담금 100% 감면
	6. 상속세	·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* '업종변경 제한' 및 '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' 폐지
② 재정금융 지원	7.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	· 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특구 인프라 확충 등 지원
	8. 기회발전특구 펀드	·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, 기업·인프라 투자 활성화 · 펀드에 일정기간(10년) 이상 투자시 이자·배당소득 세제혜택(분리과세 9%)
	9. 저리금융	· 저리 용자 상품개발을 통한 특구기업 지원
	10. 지방투자촉진 보조금	·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(지원비율 5%p 가산)
③ 규제특례	11. 3중 세트	· 규제혁신 3중세트(신속확인·실증특례·임시허가) 적용
	12. 규제특례제도	·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→ 지방시대위원회 심의·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
④ 정주여건 개선	13. 주택 특별공급	·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(10%)
	14. 주택 양도세	·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
	15. 교육지원	· 초·중·고등학교 설립지원

출처: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, 4대 특구로 맞 올린다, 지방시대위원회 보도자료(2023.9.14.)

참고자료

- 1) 이재훈. (2020). 규제자유특구 분석을 통한 제도·법제 개선 연구.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.
- 2) 정다연. (2023).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.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.
- 3) 지방시대위원회. (2023).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. 지방시대위원회 보도자료.
- 4) 정종훈 외. (2023). 지방 살릴 4대특구 만든다...기업 이전 땀 세감면·규제 특례. 중앙일보.

이민기 부연구위원

6257alsrl@krila.re.kr

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